

보도 시점 2026. 3. 12.(목) 16:00
(2026. 3. 13.(금) 조간)

배포 2026. 3. 12.(목) 09:00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를 창출한다!

- 2027년 연구개발 투자의 핵심은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 개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심의·의결

< (예시) '27년도 역점 분야(안) >

미래 기술 선도	○ 과학기술x인공지능으로 국가 과학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추진 ⇒ 연구데이터 이음터(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난제 해결(생명 공학<바이오>, 에너지 등) ○ ~^{30년}지역* 연계(실증 검증 등) 인공지능 전환 거점 구축(~^{27년} 원형프로토타입·개념설계) * ④ 전북(자동차), 경남(정밀 제조), 광주(이동 수단<모빌리티>·에너지), 대구(생명 공학<바이오>·로봇) 등 ○ 기술개발부터 실증확산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시장 창출 과제(프로젝트)’ 추진 ■ (국방) 민간 개발 무인기(드론)(군집 무인기<드론>)를 국방 용도(경계 작전)로 개조, 국방 실증 ■ (태양광) 탠덤 태양전지 고도화/셀/모듈 효율(^{27년}29/23% → ^{30년}35/28%) → ^{30년}~시장진출 지원 ■ (풍력) 20MW*급 터빈·핵심부품 설계 → ^{30년}~상용화 및 해상 풍력단지 설치·적용 ■ (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컨버터 밸브·제어기 등 개발 → ^{30년}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구축(2GW급 새만금-서화성 선로)
민생경제 성장	○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급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한 팀으로 총력 대응, 화합물·전력반도체(국방 반도체 등) 등 장기·고위험·고난도 유망기술 투자 ○ 재난 안전 연구개발은 철저히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수행 * ④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내 인공지능 활용 지역별 맞춤형 산불 위험예측 분석 서비스 개시 등 ○ K-Science(우리가 주도하고, 개척한 분야 및 꼭 해야만 하는 과학) 추진
혁신역량 강화	○ 대학 묶임 예산(블록펀딩), 실패한 연구의 자산화를 위한 후속 지원 방안 검토 ○ 출연(연) 등 인재 확보 적극 지원, 임무 중심 전략연구 사업 확대 ○ 청년창업 지원 강화, 경쟁형·민간 투자 연계형·투자형 등 투자 방식 다양화 ○ 지역 주도의 자율형 연구개발 강화(투자 비중 확대, 다양한 부처에 도입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
- (구성) 총 35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13명)

①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폴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 보안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탄소중립 분야는 산업구조 변화(인공지능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을 가속한다. 요소기술 위주 산발적 투자에서 벗어나 개발된 기술의 대규모 실증·확산까지 단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소재 기술에도 지속 투자한다.

둘째,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력·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으로 민생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첨단 이동 수단(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 분야는 민·관 간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부는 화합물·전력반도체(국방 반도체 등), 첨단패키징 기술 등 장기·고위험·고난도 유망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급한 전략기술 확보에는 민·관이 한 팀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홍수, 산불 등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철저히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수행하고 공공 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즉시 활용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현안 극복,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도하고 개척한 분야 및 꼭 해야만 하는 ‘K-Science’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우리의 인문·사회·문화적 요소와 연계하여 혁신성과 창출해 나간다.

셋째, 연구 현장 역량 고도화로 혁신의 지평을 확장하고 벤처(청년창업 등)·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과제 수 확대, 공동 인력·기반 시설(인프라) 활용 제고와 함께,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에 도전·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 묶음 예산(블록펀딩), 실패한 연구가 혁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출연기관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임무 중심 전략연구 사업 확대, 인재 확보 및 정규직 처우개선을 병행하여 성과임무 중심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 지역 등 혁신 주체의 자생적 성장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규모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부처-사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공공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쟁형, 민간 투자 연계형, 투자형 연구개발 등 투자 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성장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지방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확대, 지역 과학기술 관리 체계(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지역을 국가 균형성장의 엔진으로 혁신한다.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먼저,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성과 기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연구개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한, 예타폐지 이후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분류하여 대형 연구형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대형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은 전주기 관리체계(단계심사)를 도입하여 꼼꼼히 검토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연중 상시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7년도 투자 방향(안)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관계부처들의 투자우선 순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연구 주체별·분야별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 현장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었다. '27년도 투자 방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기획예산처 및 관계 부처에 통보되어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 요구(5월) 및 '2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9월)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인공지능 대전환 등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라며, “이제는 연구·개발 투자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창업 한국(코리아)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조정과	책임자	과장	황한진	(044-202-6740)
		담당자	사무관	장수연	(044-202-6746)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예산총괄과	책임자	과장	박상민	(044-202-6820)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2-682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과학기술·AI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

“ 정부 R&D를 **임무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추진,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민 체감 성과를 신속히 창출 ”

3대 영역 6대 중점투자분야

①

미래
기술
선도

1. 미래 경쟁의 판도를 주도하기 위한 **기술주권 확보** 총력

※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국방, 사이버보안 등

2.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성장동력 기반 확대**

※ 에너지·탄소중립, 소재 등

②

민생
경제
성장

3.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주력·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 재난안전, 국민 체감형 R&D, K-Science 등

③

혁신
역량
강화

5. **연구현장 역량 고도화**로 혁신의 지평 확장

※ 기초연구, 인재양성, 출연기관 등

6. **벤처(청년창업 등)·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

※ 중소·벤처·사업화, 지역 R&D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

Allocation

효율화와 **재투자**를 연계하여 분야별 사업 재구조화

Investigation

예타페지 이후 **대형 R&D 사업계획** 검토체계 착근

Managing

연중 상시,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점검·관리**

중점투자분야 1. 미래 경쟁의 판도를 주도하기 위한 기술주권 확보 총력

- **(AI)** 기술·기업 격차 여전, 해외 의존도 심화 ⇒ 전 국민 AI 활용 확산, 범국가 AI 대전환, AI 풀스택 기반 'AI G3' 도약 박차
 - 독자적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가 어려운 차세대 AI 기술개발 및 인프라·핵심인재 확보 집중, 지역 중심 실증에 전략적 투자
 -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해 AX R&D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예) 3년 이내) 조기 성과 창출 유도, 무늬만 AI인 사업 기획보완 강화

< (예시) '27년 주요 예상성과 >

- 과학기술xAI로 국가 과학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추진
 -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난제해결(바이오, 에너지 등)
- ~'30년 **지역* 연계**(실증·검증 등) **AX 거점** 구축(~'27년 프로토타입·개념설계)
 - * 예) 전북(자동차), 경남(정밀제조), 광주(모빌리티·에너지), 대구(바이오·로봇) 등
 - 지역별 강점 분야 육성으로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피지컬AI** 월드모델 관련 멀티모달(영상, 음성, 촉각 등) 데이터셋(1만 시간) 확보
- 과학기술 AI **연구용 GPU** 지원(8천장), 대학 내 GPU 집적시설 구축(3곳)
- **AI·AX대학원**(20개, ⁽²⁶⁾950명 → ⁽²⁷⁾1,100명 입학), **최고급 신진연구자** 양성(27개 프로젝트)

- **(첨단바이오)** 민간투자 부족, 제조·시밀러 위주 성장 ⇒ 국가적 경험 축적이 가능한 미래 성장 분야 집중 투자,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 AI 바이오 전환 및 혁신 플랫폼 기술(합성생물학 등) 선점에 투자 확대, 기초·원천부터 임상까지 전 주기 연계(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포함) 강화
 - ※ (²⁷년예상성과) AI 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합성신약 분야 시범 운영) 본격 착수로 AI 바이오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 유기적 연계 추진
- **(양자)** 3대 분야(컴퓨팅·통신·센싱) 집중 투자 중, 기술격차 여전 ⇒ 우리의 수준·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육성으로 양자기술 주도 시대 초석 마련
 - 양자컴퓨팅 분야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Use-case 발굴 동시 추진, 양자통신·센싱 분야는 기업 주도 상용화·실증 지원 확대
 - ※ (²⁷년예상성과) 광자·이온트랩 등 4개 유망 플랫폼 기반 10큐비트급 QPU 개발, 100큐비트급 이온트랩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본격화 등

- **(우주·항공·해양)** 우주·항공기술 추격 중, 산업생태계 형성 미흡 ⇒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 민간 주도 우주개발 확대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 ('27년예상성과) 누리호 6차 발사(초소형 군집위성 5기 탑재) 등

- 해양북극항로 '30년 상업 운항 준비,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개발 등 추진

- **(국방)** 제조업 기반 방위산업 성장 ⇒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Spin-On) 및 선순환 촉진으로 K-방산 혁신, 국방력 강화 도모

- AI·양자 등 민간 우위 첨단기술·인력이 국방 분야에 유입되도록 접근성*·유연성이 강화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추진

* 철저한 보안 下 국방 데이터 접근성 개선(예 국방 AX거점사업) 연관과제 지원 강화

** Agile방식(선납품지속개발), 임무중심 경쟁형 연구, 민군 이중용도(우주항공), 실증 중심 연구개발 등

< (예시) 실증 중심 연구개발 - 드론 분야 시장창출 프로젝트 >

◆ 기술개발에서 실증·확산(혁신조달 등)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여 구체적 성과 가시화

- AI 기반 자율비행 등 요소기술을 상용드론에 접목한 후 군 실증을 통해 도입 추진
- '27년 민간 개발 드론(군집드론)을 국방 용도(경계작전)로 개조하여 국방 실증 추진

- **(사이버보안)** AI·양자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위협 심화 ⇒ 핵심 인프라·정보보호기술 확보로 금융·통신 등 사회 전 분야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제고

- 첨단정보보호기술(양자내성암호(PQC) 등) 개발 등 투자 강화, 산업구조(영세 기업 위주)를 고려하여 정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추진, 기업성장 기반 지원

※ ('27년예상성과) 국가행정망 등 대상 공격 탐지·식별 기술개발 등

2.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성장동력 기반 확대

- **(에너지·탄소중립)** 요소기술 위주 산발적 투자 ⇒ 산업구조 변화(AX, GX 등) 총력 대응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확산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 발굴·추진

< (예시) '27년 주요 예상성과 - 시장창출 프로젝트 추진방향(안) >

태양광	■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성능 향상(셀/모듈효율 29%/23%) → '30년 효율 극대화(셀/모듈효율 35%/28%) 및 '30년~시장 진출 지원
풍력	■ 초대형(20MW*급) 터빈·핵심부품(블레이드, 베어링 등) 설계 → '30년~상용화 및 해상 풍력단지 설치·적용
SMR	■ 혁신형 SMR 표준설계(안) 검증 → '28년 표준설계인가 → ~'35년-SMR 상용화 실증
HVDC (고압직류송전)	■ 정부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 민간 전압형 컨버터 밸브·제어기 개발 → '30년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구축(2GW급 새만금-서화성 선로)

※ 예타·핵심사업 추진로드맵에 따라 제시(세부일정은 변동가능)

- (소재)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기술 자립화 추진 중 ⇒ 첨단·미래소재 및 부품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을 지속 지원하여 공급망 문제 등 선제 대응
 - AI 활용 신소재 개발 등 집중 지원, 공급망 안정 품목(희토류 등) 관련 기술 투자 지속,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강화
 - ※ ('27년 예상성과) AI 기반 소재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착수

3.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주력·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등 일부 분야 약세 ⇒ 전략적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내 위상 공고화
 - 분업민간은 단기·현안해결·상용화 기술, 정부는 장기·고위험·고난도 유망 기술*에 투자하고 협업시급한 전략기술 확보에는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
 - * 화합물·전력반도체(국방반도체 등) 기술, 첨단패키징 기술 등
 - ※ ('27년 예상성과) 메모리 중심 인터페이스 등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고도화 등
- (첨단로봇·제조) 핵심 HW/SW 해외의존도 高 ⇒ 미래로봇(휴머노이드 등) 및 AI 자율제조 기술 확보, 핵심요소 자립화로 주력산업 혁신 기반 마련
 - 로봇부품(구동기 등)/제조SW(가상제조 등) 핵심기술 자립화 등에 중점 투자, 수요 기업 참여 확대로 성능 최적화·초기 시장 창출 지원
 - ※ ('27년 예상성과) 유사 업종 제조기업간 데이터(공정최적화, 품질관리 등) 연계·공동활용 등

- **(차세대통신)** 5G 상용화('19) 이후 시장 정체 $\Rightarrow$ 6G 상용화, 저궤도 통신 위성 발사, 통신망 AI 도입 등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구축
 - 6G 상용화·위성통신에 맞추어 민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정부는 표준기술 확보 등에 중점 투자
 - ※ (²⁷년예상성과) 6G 기지국·단말·네트워크 핵심부품 확보(20개), 저궤도 위성 상세설계 등
-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 등 기술격차 존재 $\Rightarrow$ 자율주행 기술 격차 해소, 친환경차 기술우위 유지를 통해 미래차 시장 주도권 확보
 - AI 기반 E2E 자율주행 SW 및 핵심부품 개발, 친환경차 성능·편의성 향상 기술에 중점 투자, 테스트베드 운영 등 실증 지원 병행
 - ※ (²⁷년예상성과) AI 자율주행 모델 개발, 전기차 편의성 향상([㉠]충전시간 現18 $\rightarrow$ 15분↓) 등
- **(이차전지)** 중국산 저가 공세, 전기차 캐즘 등 이중고 직면 $\Rightarrow$ 신 시장 선제 대응 및 초격차 기술 선점으로 글로벌 주도권 재탈환
 - 시장 수요 변화(전기차 수요 편중 $\rightarrow$ ESS, 로봇 등 신수요)에 대응하여 상용전지 투자를 다변화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개발에 주력
 - ※ (²⁷년예상성과) 나트륨이온전지: 160Wh/kg급 셀 개발 차세대전지: $\sim$ ²⁸년 400Wh/kg급 셀 개발 등

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 **(재난안전)** 지속 투자 중이나 활용 성과 미흡 $\Rightarrow$ 첨단기술 기반 대형·복합재난, 신종 범죄 예측부터 구조·복구·사후관리까지 대응체계 고도화
 - 특히, 타 분야 우수기술 적용(Spin-On), 현장의견 반영(철저한 현장문제 해결),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R&D 성과를 현장에서 즉시 활용 추진
 - ※ (²⁷년예상성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내 AI 기반 지역별 맞춤형 산불위험예측 서비스 개시 등
- **(국민 체감형 R&D)** R&D를 통한 국민 효능감 향상 부족 지적 $\Rightarrow$ 사회 현안 극복, 국민 생활 개선 등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해결책 모색
 - R&D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 지원 병행
 - ※ (²⁷년예상성과) 수요 맞춤형 돌봄로봇, 저출생 문제 대응 기술개발 등
- **(K-Science)** 사회 전반에 과학적 사고 및 문화 확산 필요 $\Rightarrow$ 우리가 주도하고, 개척한 분야 및 꼭 해야만 하는 과학을 통해 체감 성과 창출

5. 연구현장 역량 고도화로 혁신의 지평 확장

- **(기초·인재)** 연구현장 복원 중 ⇒ 안정적 지원, 기관역량 강화,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안정성과 도전성이 균형 잡힌 연구생태계 구축
 - 개인기초 과제 수 확대, 공동 인력·인프라 활용 제고*, 기관 연구역량 내재화를 위한 블록펀딩 검토 및 젊고 유능한 우수인재 확보 총력
 - * 대학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등을 공동활용 연구거점으로 재편하고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
 - 실패한 연구가 혁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핵심인재가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출연기관)** PBS 단계적 폐지 추진 ⇒ 안정적인 연구 자원 마련과 함께 우수인재 확보를 병행하여 출연기관을 국가 임무형 연구 거점으로 육성
 -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정규직 처우개선·전략적 중원, 인건비 출연금 지원 비중 확대, 전략연구사업 강화*와 함께 면밀한 점검·예산 환류 추진
 - * 매년 수탁 종료 규모 수준 재원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²⁶⁾0.45조원 → ⁽²⁷⁾약 1조원

6. 벤처(청년창업 등)·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

- **(중소·벤처·사업화)** 연구성과 확산 저조 우려 ⇒ 공공 R&D 기술사업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R&D-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확립
 - 기술이전·사업화 스케일업을 위한 부처-사업 간 협력 강화, 청년 창업,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투자방식 다양화* 도모
 - * 경쟁형, 민간투자 연계형, 투자형(R&D 지출을 전제로 하는 정부 출자 방식) R&D 등
- **(지역R&D)**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성장 기대 증가 ⇒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한 R&D 투자로 지역을 국가 균형성장의 엔진으로 혁신
 - 지역 자율형 R&D 확대*,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기업 연계 강화,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지역 R&D 효과성 제고
 - * (現)2개 사업(과기, 산업) 추진 중 → ⁽²⁷⁾자율형 R&D 비중 확대, 다양한 부처에 도입 검토
 -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재편하여 지역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투자시스템 고도화 ① 효율화와 재투자를 연계하여 분야별 사업 재구조화

-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 기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R&D 사업 재구조화 추진
 - ※ 올해 R&D 예산 심의부터 AI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 유사·중복 검토 등에 활용
- 분야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재설계하고 신규 대형 사업은 파급력이 큰 성과가 신속히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
 - ※ NEXT 프로젝트, K-문샷 추진 등

② 에타페지 이후 대형 R&D 사업계획 검토체계 착근

- 에타페지에 따라 대형 R&D 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분류, 연구형은 신속 검토, 구축형은 전주기 관리체계(단계심사) 도입
 - ※ 대형 연구형 R&D 사업은 '26.4월까지 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추진

③ 연중 상시,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점검·관리

- 대형 연구형 신규 R&D 사업계획 검토(~4월), 예산 배분·조정(~6월), 집행 점검(분기별), 평가결과 환류 강화 등을 통해 R&D 사업의 효과성 제고